## 코로나 7차 유행…道, 취약시설 방역 강화

전남 신규 확진 105일 만에 3천명선 다시 돌파 요양병원·시설 등 자가키트 5만여개 긴급 지원

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 개월 만에 다시 3천명선을 돌파하는 등 7차 유행 확산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감염 취약시설 600곳에 선제 검사용 자가검사키트 5만여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내 코로 나19 신규 확진자는 3천165명으로 집계됐 다. 전남에서 3천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9 월5일 3천350명 발생 이후 105일 만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시(市) 지역과 남악 신도시가 있는 무안군의 확진자가 많다. 실제 순천 555명, 목포 437명, 여수 402 명, 광양 336명, 무안 205명, 나주 180명

일 1천891명 ▲18일 887명 ▲19일 3천165

병의원 RAT(신속항원검사)가 시작 되는 주초 완만한 증가에 이어 주중 소 강 상태, 주말·휴일 감소 양상이 매주 반 복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시작된 7차 유행은 과거 유행 당시 급증-급감 양상 과 달리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는 게 전남도의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전남 도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600개소에 자가검사키트 5만2천개 를 긴급 지원했다.

지원 키트는 출퇴근 중에 불특정 다수 와 접촉이 빈번한 종사자의 선제 검사에 사용해 시설 내 확산 차단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 는 감염취약시설에 선택과 집중 전략으 로 방역을 계속 펼치고 있다.

이번 7차 유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률 제고에 집중한 결과, 19일 현재 5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문권옥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감 염 취약시설은 종사자에 의한 시설 내 확산이 빈번하기 때문에 증상 유무에 상 관없이 정기 선제 검사가 꼭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동절기 2가백신 추가 접 종을 하지 않은 시설은 신속한 접종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는 1천974명이다.

### 결식아동 급식단가 8천원으로 인상

광주시, 내년 1-2월 겨울방학 기간 지원

광주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를 7천원에 서 8천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1 만4천61명이며,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지원한다.

이번 급식단가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결식아동의 급식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아동에게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겨울방학 기간 결 식 아동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교사, 이웃 등을 통해 적극 지원 대상자를 발 굴하고 계속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

지원 대상 아동은 유형에 따라 아동급

식카드 가맹점 일반음식점 등 1만6천61 1곳, 지역아동센터 303곳, 도시락 배달 4 곳에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아동급식카드를 개선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기존 1천900여곳에서 1만6천여곳으로 대 폭 확대하고, 아동들의 낙인감 해소 를 위해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신용카드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등 이 용 아동의 편의를 위해 지속 노력하 고 있다.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은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아동의 건강 한 성장을 위해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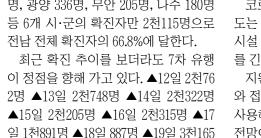
#### 道,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전남도는 20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 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5 년 11월까지 3년간 인증기관 자격을 유 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심사·인증 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다양한 교육 참여로 자기개발 기회 제공, 수준 높은 직장어 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 삶의 질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4년 가족친화 인증기관 으로 최초 선정된 이후 연장과 재인증 심사를 받아 자격을 유지했고 이번 재인 증 심사 통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와 균형을 위해 지원하고 실천하는 기관 으로 평가받게 됐다. /김재정기자





6·25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안장식

20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된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에서 영현이 봉송되 고 있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유가족, 국방부, 보훈단체 관계자,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웅들의 마지막가는 길을 추모했다.

/연합뉴스

## 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넘어 '생활인구' 개념 도입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

구'라는 개념이 법에 새로 도입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 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

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주민등 록상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 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

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에 거주 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 에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 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 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 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 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 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 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상세 한 요건을 행안부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생활인구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 계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 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 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 람으로 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 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도 마 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 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한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 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 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 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연말 특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

#### 'MB사면' 기정사실…김경수 복권 없이 잔형면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 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의 통화에서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 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 아 가면서 주재한다.

20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다음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 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 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 윤 대통 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의 특징 은 '정치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15 특사에서는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경제인 중심 사면이 단행되고 정치인은 전면 배제됐다.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이명 박(MB)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 이는 분위기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 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 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야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 의 경우, 미납 추징금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이 뤄졌으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

이밖에 정치권 인사 중 최경환 전 경 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꾸 준히 거론된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 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 광주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

공무원 복무 위반 · 소극행정 등 집중 감찰

광주시가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확립 하기 위해 내년 1월18일까지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중점 감찰 사항은 ▲공가·병가 허위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위반 행 위 ▲음주운전, 갑질, 성희롱 등 품위 손 상 행위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금품·향응수수, 부정 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한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을 통 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청렴하고 부패 없는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쿠인모집광고

### 1천만원 소개 성과수수료

- 분양아파트 소개 업무
- 모델하우스에 고객 동반 방문
- 전문상담사 별도 성과수수료 1천3백만원
- 광주 최고급 아파트 분양홍보



010-3205-6688 입사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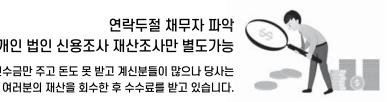
# 사실 못 받은 론 했

###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패산조새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채권추심 전문법인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 광주역앞 양한방용 병원건물 급매



- 광주역앞 이면도로 코너
- 상업지 대지534m² 6층연건평1.345m²
- 병실25개,70베드,승강기1대 주차16대
- 스프링쿨러,소방시설 2022.8월 법정시설 완비
- 양한방 의료장비 완비 \*\*\* 인수와 동시에 빈몸 영업가능 [급매] 27억5,000

###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레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